

# 경제활력 해법 마련 머리 맞대다

전북도 ·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포럼’ 출범

4개 분과 33명 구성

분과별 개선과제 도출 집중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2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전북 경제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북 경제포럼’은 전북경제 현황 진단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 등 분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위탁한 사업이다.

포럼위원은 4개 분과에 지역대학 교수, 중기청·한국은행·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및 산업·노동계 등 정·관·산·학·연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합한 출범을 예고했다.

이날 포럼은 포럼 운영계획 발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대응방향, 전북 경제산업 현황 및 전망의 기초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피해는 인구밀집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의 지역경제에 타격이 컸으며, 지역별 GRDP 성장률 전망에서 전북은 경북, 전남, 경남, 강원 등과 함께 재정지원 효과로 상대적으로 피해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2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전북 경제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경제포럼은 거시경제, 일자리·노동,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의·혁신 4개 분과별 개선과제 도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디지털 비대면 문화 확산 대응 6개 사업, ▲코로나 이후 복지·돌봄·교육 등 사회 안전망 강화 6개 사업, ▲지역다목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강화 4개 사업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산학연 협력,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인구대책,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북 경제포럼은 ▲지역경제 성장 방향과 창업 인프라 활용방안, ▲2021년 경제이슈 대응 전망, ▲고용위기 경보지수 등 경제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도 ▲주력산업 개편방향,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 ▲전북형 뉴딜 대응 등 전북 전략산업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경제포럼이 올해에는 분과를

세분화하고 참여 전문가도 대폭 늘렸다”며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연말까지 분과별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담은 과제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과 동시에 거시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제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북경제 살리기 솔루션이 나오는데로 사업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분과별 포럼위원은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문 대통령, “국민도 정치 신뢰”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서 제안

“백신 인센티브 마련... 접종률 높이기 위해 국회도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언급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번 회의 날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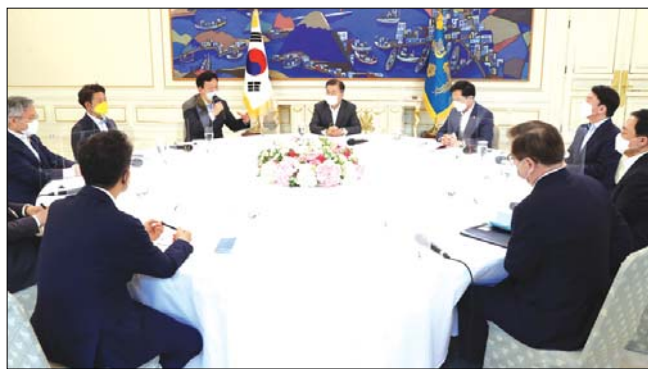
그러면서 “오늘 만나보니 소통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추가 설명을 내놓고 여야 대표들이 언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적시된 ‘내면해결’ 관련 문제를 두고 중국 측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과제”라며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산업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故) 이선호씨 사인을 언급하며 “법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뉴스

## “1·2심 무죄 판결,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과”

이용호 의원, 형사상고심의위 개최 · 심의 공개 요청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선거법 등 2심 무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 개최 및 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심에 이어 이날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먼저 “오직 진실된 사실 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법부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식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횡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평생 송사하는 거리가 멀었던 저와 제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당한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을 향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국힘 소속 국회의원 공식 초청

(사)5·18구속부상자회가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을 공식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한다. 이어 오는 27일 다시 광주를 찾아 5·18부활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5·18부활제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영령들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5월 27일에 진행되고 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부활제에 초청을 해주신 5·18구속부상자회 문홍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의 상부돔 구조 안전성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한빛원전 4호기 상부돔 조사 입장 명확히 해야”

민주 윤준병 · 이용빈 의원, 안전성 점검 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이용빈 의원(광주·광안)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의 상부돔 구조 안전성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자(한수원)와 규제기관(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역 대표 그리고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창군은 표주원 위원장(한빛원전 고창안전협의회), 조규철 임정호 의원(고창군의회 영광한빛원전 특별위원회) 등이 참석했고, 영광군은 김병원 임영민 의원(영광군의회), 김용연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대량의 공극 발견 및 격납건물 철관 부식 등의 부실 공사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의 상부 돔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격납건물의 상부 돔 구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전적 대안을 모색해 원전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돔 관련 대책 논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노후원전 안전조사(TF) 민간위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가 발표 및 토론과 원안위의 입장을 공유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빛원전은 그동안 안전을 확보하고, 원전안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적극 노력해 이 제기돼 원전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된 대량의 공극으로 인해 상부돔 검사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지역에 장비개발을 통해 한빛 4호기 상부 돔 조사를 약속했으나, 상부돔 접근장비 개발에 관한 기술적 한계와 고소작업 위험성을 이유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사장비가 개발된 만큼 한수원은 성능검증에 나서 약속사항인 상부돔 조사에 임해야 하고, 원안위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빛원전 4호기 상부돔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오늘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4호기뿐만 아니라 한빛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안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회의가 정례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원전 안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바로 기준선이 되는데, 그동안 원전은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한빛원전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는데, 사업자인 한수원과 KINS,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고, 원전 문제에서만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가 발표 및 토론과 원안위의 입장을 공유했다.”

송 의장은 “현행 법령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혁신도시를 조성한 광역시·도 또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로 한정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체 수 등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활성화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의무채용 목표 30%까지 확대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채용이나 특정 직군

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된 대량의 공극으로 인해 상부돔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지역에 장비개발을 통해 한빛 4호기 상부 돔 조사를 약속했으나, 상부돔 접근장비 개발에 관한 기술적 한계와 고소작업 위험성을 이유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사장비가 개발된 만큼 한수원은 성능검증에 나서 약속사항인 상부돔 조사에 임해야 하고, 원안위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빛원전 4호기 상부돔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오늘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4호기뿐만 아니라 한빛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안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회의가 정례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원전 안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바로 기준선이 되는데, 그동안 원전은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한빛원전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는데, 사업자인 한수원과 KINS,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고, 원전 문제에서만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가 발표 및 토론과 원안위의 입장을 공유했다.”

송 의장은 “현행 법령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혁신도시를 조성한 광역시·도 또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로 한정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체 수 등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활성화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의무채용 목표 30%까지 확대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채용이나 특정 직군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개선율”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6일 인천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운영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현행 법령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혁신도시를 조성한 광역시·도 또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로 한정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체 수 등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활성화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의무채용 목표 30%까지 확대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채용이나 특정 직군



채용사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 전체 채용인원(연구·경력직, 지역본부 채용인원 포함) 대비 지역인재채용 대상인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